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

#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5. 7.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

# 목 차

<b>I. 적극행정 추진 개요</b>	<b>4</b>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4
2. 2024년 주요 추진 성과	5
3. 반성 및 평가	9
<b>II. 2025년 적극행정 추진 전략 및 과제</b>	<b>11</b>
1. 2025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11
2. 2025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12
3. 적극행정 추진 협력체계 강화	13
[참고]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15
<b>III.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b>	<b>16</b>
1. 적극행정 세부 추진 과제	16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공직문화 개선	19
3.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19
4. 적극행정 민원 창구 운영	22
<b>IV.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b>	<b>23</b>
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23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25
3.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27

## **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28**

1. 사전컨설팅 운영 활성화 및 기능 강화 ..... 28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30
3. 소송 등 지원 ..... 32
4. 실무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 35

## **VI. 소극행정 혁파 ..... 38**

1.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 조치 ..... 38
2. 소극행정 피해 구제제도 마련·운영 ..... 39
- [참고]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 41
3.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 42

## **VII.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44**

1. 소속 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44
2.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 45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 46

## **VIII. 향후 추진 계획 ..... 48**

1.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 48
2. 추진상황 점검 및 적극행정 확산 관리 ..... 49
3. 금후 계획 ..... 49

# I

## 적극행정 추진 개요

### 1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 필요

- 시대의 변화 속에 공무원 인식의 전환이 중요해짐에 따라 소극 행정, 기존 관행과 선례를 중시하는 업무 행태 탈피 필요
-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 조성 및 문제 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전복' 구현

#####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

-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적극행정 역량 집중 제고를 통해 일상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 필요
-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움직이는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삶에 스며드는 전방위적인 적극행정 실천 노력
- 성과 지향형 적극행정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고, 도전에 대한 충분한 격려와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문화 마련

#### □ 도지사 말·말·말

##### ■ 김관영 전북지사 "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 적극행정 주문

- 13일 도청에서 열린 '소통의 날' 행사에서 적극적 행정 강조 / "전복의 대전환, 전복의 성공 신화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청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22.9.13., 연합뉴스 기사 발췌)

##### ■ 김지사 "적극행정 펼쳐달라"

- 12일 합동간부회의에서 도정 운영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 주문 / "도민 앞에 성과로 응답할 시점" / "정량적 수치와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홍보로 도민 체감을 높이자"
- 산하기관의 책임도 강조 / "출연기관은 단순한 집행기관이 아닌 변화의 주체"라며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도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결과로 답하라"('25.5.12., 전북중앙 기사 발췌)

## □ '24년 중점과제 추진 성과

### ① **정책기획관** 민생살리기를 위한 “다함께 민생정책추진단” 운영

- (특별대책 추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 극복, 도민 고충 해결, 민생문제 완화 등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마련·추진

#### ▣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4.23.)

- 3대 분야 총 65개 사업(예산 사업 58개, 비예산 사업 7개), 774억 원\* 긴급 예산 추가 투입(총사업비 4,064억 원) 및 제도 개선
  - [위기극복 민생일보] 21개 사업, 586억 원 추가 투입(총사업비 3,234억 원)
  - [고충해결 민생일보] 25개 사업, 62억 원 추가 투입(총사업비 296억 원)
  - [일상속의 민생일보] 19개 사업, 126억 원 추가 투입(총사업비 534억 원)

- (현장행정) 핵심과제 중심으로 261회 현장행정 실시
  - 지휘부(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81회, 담당 부서장 180회
- (홍보)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SNS), 누리집, 홍보 인쇄물,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홍보 추진

### ② **농생명정책과** 농생명지구 운영을 통한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 (지구지정)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7개\*, '24.9.10.),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및 지구 실행계획 중앙부처 협의 완료(12월)
  - \* (익산) 동물 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진안) 홍삼,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치즈,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
- (특례) 「전북특별법」 제·개정 추진으로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 진흥지역 해제 등 농생명산업 육성 관련 12개 특례 조문 시행
-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24.7.5.)
- (자체사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50억 원, 5년)

### ③ **진안소방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한 시골 고령층 생명·재산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대책**

- 적극행정 관련 진안군과 업무협약 추진('24.4~8월) 및 진안소방서 사업 시범 운영 시행('24.8월~)

기관명	시행사항
진안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용소방대원에게 정책 설명 후 비상연락망 등록 관련 동의서 수령 완료</li> <li>▶ 의용소방대원 대상 정기·수시교육 시 화재 및 응급처치요령 교육 실시</li> <li>▶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방문하여 홍보 동영상 자체 제작 완료</li> </ul>
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게이트웨이(총 1,060 가구)에 의용소방대원 연락처 사전등록 완료('24.8월)</li> <li>▶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정 방문 시 게이트웨이 사용법 수시 교육</li> </ul> <p>* 공무원 2명이 1일 평균 4가구 정도 방문</p>

- 대상자 방문·설명 및 언론 보도 추진 등 사업 적극 홍보,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 훈련 및 정기교육 실시 등

대상자 방문 홍보	방송사 언론 홍보	골든타임 훈련

### ④ **교육협력과** **전북시민대학 추진을 통한 도민 평생교육 질적 확대**

- 지자체 및 도내 대학 간 교육협력에 기반한 도내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확립을 통한 평생교육 체계 확장
  - (지역캠퍼스) 6개 지자체, 11개 대학 참여 ➡ 학습자 총 1,019명
  - (재직자 역량교육) 7개 지자체, 5개 대학, 14개 기업·공공기관 참여 ➡ 학습자 총 455명

## □ **자치행정과** **민원후견인제와 원스톱 민원창구 연계**

-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편의성 증대와 민원처리의 중복이나 누락 방지
  -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되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도모
- ※ 민원건수 : ('22년) 19,684건, ('23년) 7,667건, ('24년) 7,678건

## □ **인구청년정책과** **도내 적극행정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30건), 우수사례 선정(10건) 및 홍보(카드뉴스,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 기관 내 적극행정 홍보 게시판 운영
- 전북자치도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시 추천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창구 마련

## □ **총무과** **소방본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조치**

- '24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7명) 대상 인센티브 부여
    - **파격적 인센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근평가점/교육훈련 우선선발 중 1종) **100% 부여\* 달성**
- \*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5명),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1점 부여(6명), 장기교육 훈련 희망 시 선발(1명),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1명)

##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민원 신속 해결 및 적극행정 면책을 통한 공무원 보호**

- 현장 상담창구 확대 운영, 지속적인 제도 홍보 등으로 활성화 도모
  - 14개 시·군 사전컨설팅 감사 현장 상담창구 운영(22건 처리)
  - 사전컨설팅 감사 56건 처리(평균 처리기간 6.7일) \* 관련규정 : 30일
  - 도, 시·군, 출연기관, 법인·단체 대상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집('20~'23) 제작·배포('24.8월) 등 제도 지속 홍보·안내(연중)

- '24년 **사전컨설팅 감사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행정안전부)
-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로 적극행정 활성화 도모(적극행정 면책 9건 신청)

#### □ **법무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 행정포털 내 법률정보서비스 「로앤비(LAWnB)」 구축('20.7.1.) 및 제공
  - '24년도 검색 수 18,191건, 방문자 수 5,441명

#### □ **감사위원회** 소극행정 엄정조치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 '24년 소극행정 신고 및 처리 실적 : 26건
  - 관 중심 적당편의 소극행정으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1명 신분상 '주의' 처분 등

#### □ **자치제도와** 적극행정 사례발굴 및 현장체감 규제혁신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사례 107건 발굴
  - 행정안전부 주관 '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 (우수사례) 규제혁신으로 전국 최초 블루오션을 찾은 소동 고체연료화

#### □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교과목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구분	교육과정	수강인원
집합 교육	신규후보(임용)자 교육	9기수 871명
	핵심리더 교육	2기수 164명
	5급, 6급, 임기제 역량 강화(3과정)	27기수 771명
	소송수행 역량 강화	1기수 34명
	적극행정의 이해	2기수 39명
사이버 교육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등	9과정 1,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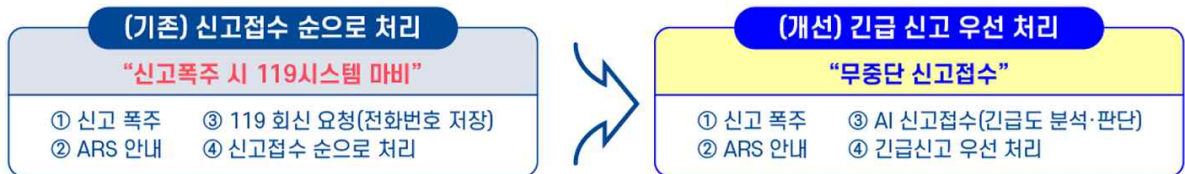


## □ '24년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 ① 119종합상황실 전국최초 대형 재난에도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단 지능형 119 콜백 시스템 구축·운영

- 4차 산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및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119 신고 폭주 시 중단 없는 119 신고 접수 체계 마련

#### ✓ 신고 폭주 시 119신고접수 체계 전·후 비교



### ▶ 범정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 수상

한국일보  
전북소방, 최초 도입한 AI 콜백 시스템... 서울도 벤치마킹 나서  
입력 2025.02.06 오후 9:31 수정 2025.02.06 오후 10:09

전화 폭주 시 AI가 수집·분석  
위급성 판단... 골든타임 확보

5일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AI 기반 긴급 구조 시스템 운영 방식과 핵심 기능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범정부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및 타 시도 벤치마킹 요청

### ② 동물방역과 축산과 환경,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의 기준이 되다

- 전국 최초로 동물사체처리 신고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신고 면제 업체 선정으로 축산농가 신고절차 간소화·적법화
  - 연간 농가당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비용 447만 원 절감 효과
  - 친환경적인 동물사체 처리가 가능해져 동물사체 불법투기 방지 및 환경오염 민원 해소에 따른 축산농가 이미지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미신고 가축폐기물 관리시설 적법화 추진 우수 사례'로서 전북 성공사례 전국 공유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 미진

- 우수공무원 선정 및 시상, 우대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견 제시 제도 활용 등 현안처리 사안은 적어 형식적인 운영 지속

▶ 의견제시 제도 홍보를 통한 현안처리 활성화로 도민 체감도 제고 필요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 제도개선 및 활성화 노력 필요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송 지원 규정을 정비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보상 다변화를 통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회와 계기 제공

▶ ①적극행정 관련 제도 정비 및 운영 내실화, 교육 강화, 제도 홍보의 양과 질 개선

②신규 보상 제도(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등) 도입 · 운영 적극 추진

□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비대상 사무 신청 사례 빈번

- 시·군에서 사전컨설팅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신청기관 감사부서에서 사전 검토 없이 신청
  - 관련 규정이 명확하여 컨설팅이 불필요하거나 단순한 법령 해석, 책임 회피 또는 민원 떠넘기기 등 비대상 사무 신청 사례 발생

▶ 신청기관 감사부서의 대상요건 적합성 사전검토 및 명확한 의견 적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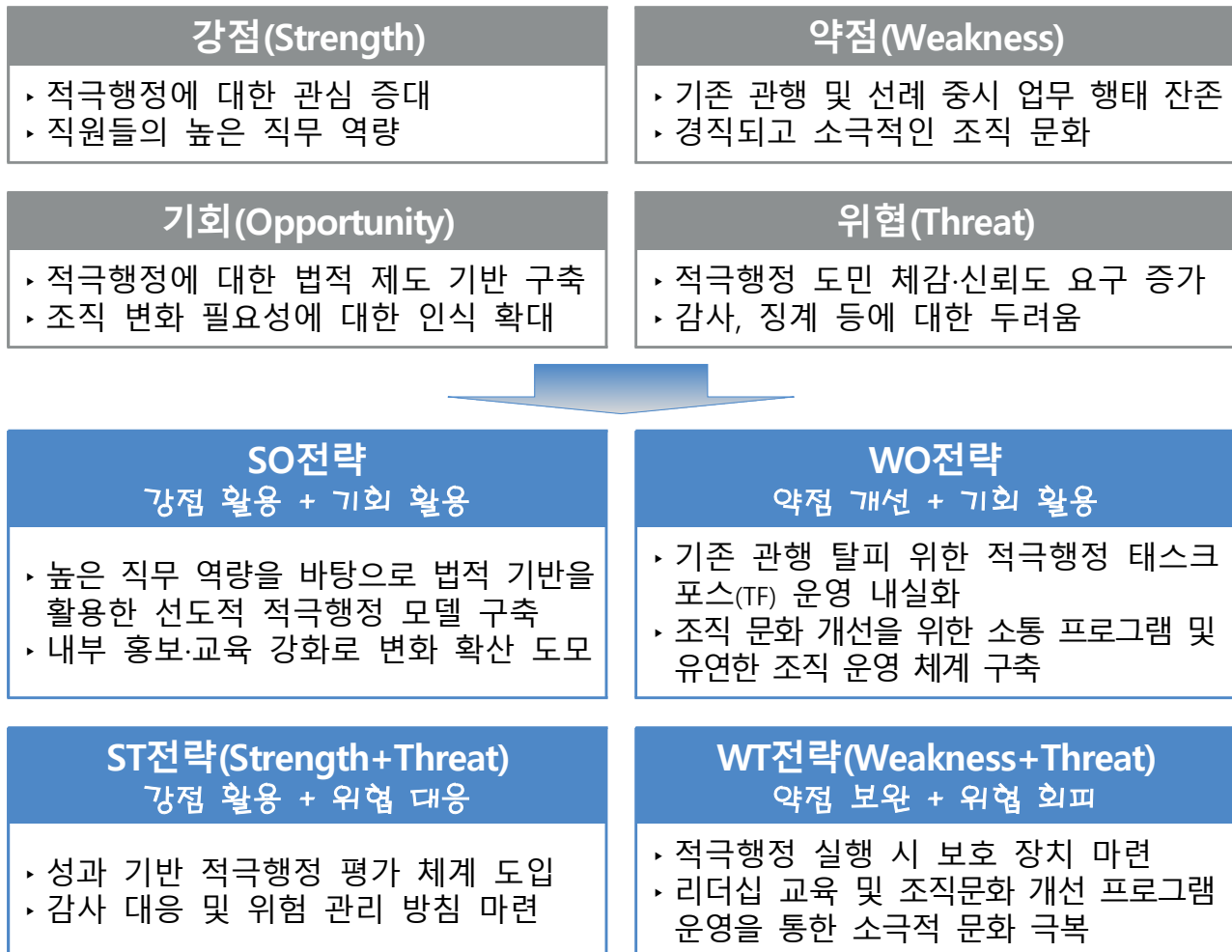
## II

# 2025년 적극행정 추진 전략 및 과제

## 1

## 2025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 □ 전북자치도 적극행정 추진상황 SWOT 분석



### □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 감사, 징계에 대한 두려움 등 공직자의 적극행정 동기 저하

▣ 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 및 안정적이고 확실한 보호·지원 제도 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형식적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관리 체계 점검 필요

▣ 위원회 관련 제도 홍보 자료 지속 배포 및 소극행정 예방 관리 강화

### □ 기대효과

○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한 도민 체감도 향상 ➡ 도민 삶의 질 개선

## 목 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현

## 전 략

- ◆ 적극행정 의사결정 지원 제도 내실화
-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확대
- ◆ 소극행정 엄정 조치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예방
- ◆ 적극행정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 강화

## 5대 추진방안

## 13개 핵심과제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 적극행정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 적극행정 창구 운영을 통한 도민 체감도 제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발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활성화
-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 지원 강화
- ◆ 실무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 ◆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 조치
- ◆ 소극행정 피해 구제제도 마련·운영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 도민 참여·소통 강화로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

### □ 적극행정 실무 태스크 포스(TF) 운영

- 인사, 교육, 감사, 법무, 자치행정 등 다양한 부서와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협조체계 운영
- (전담부서) 인구청년정책과(적극행정 책임관)
- (지원부서) 감사위원회, 정책기획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자치행정과, 총무과, 소방본부(소방행정과), 자치제도과, 인재개발원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TF

##### 인구청년정책과

- 적극행정 업무 총괄 조정 및 지원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관리
-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적극행정 공직 문화 정착·확산



##### 감사위원회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 조치

##### 정책기획관

- 실무자 정책 결정 부담 완화

##### 예산과

- 도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출연기관) 적극행정 협업·확산 지원

##### 법무행정과

-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 지원
-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과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구성 지원
-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등

##### 총무과, 소방본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및 소극행정 징계 관련 사항
-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지원

##### 자치제도과

- 적극행정 규제해소 지원
- 규제해소 사례 발굴·관리

##### 인재개발원

-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상시 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

## □ 공공기관 협조체계 강화

### ○ 도-공공기관 협조체계 구축·운영

- (목적) 도내 공공기관(공기업·출연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도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
- (대상) 도 산하 16개 공공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
- (방식) ① 자체 적극행정 로드맵 수립 및 기관 내 적극행정 활성화 독려, ② 사전컨설팅 감사, 면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안내, ③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 상호 연계 협조

### ○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우대

- (보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에 대해 임직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도 사전컨설팅 감사 및 면책 제도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공무원 외 공공기관 임직원 적용대상 포함
- (인센티브 부여) 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시, 우수 공공기관에 도지사 표창 등 수여하여 적극행정 참여 유인 확대

### ○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 (교육) 적극행정 역량 강화 집합교육 수강 및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에 개설된 사이버과정(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등) 활용 지원
- (홍보) 적극행정 직원 보호 제도 및 적극행정 교육 수시 안내

## □ 공공기관 적극행정 추진 의지

### ○ 자체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또는 적극행정 추진 과제 선정

- (실행계획 수립) 전북개발공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참고)
- (추진과제 선정)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14개 출연기관(III-1)



## 2025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안)

2025. 6.



### 2025년 전북개발공사 적극행정 추진계획[요약]

#### ❶ '24년 성과 및 반성

- (성과) 적극행정 정책보호관 제도 도입을 통한 직원 적극행정 지원·보호제도 강화
- (반성) 일회성 인센티브와 교육을 넘어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관리방안 체계 필요

#### ❷ '25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	적극행정 확산, 도민행복 실현		
추진목표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도민 만족도 증대		
❶ 시스템 개선	❷ 지원·보호 강화	❸ 소극행정 예방 노력	❹ 참여·소통 강화
① 적극행정 추진체계 유지 ② 적극행정위원회 강화 ③ 위원회 의견채취 제도 활성화	④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⑤ 연책제도 운영 ⑥ 정책보호관 제도 운영	⑦ 소극행정 예방 점검 제도화 ⑧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⑨ 적극행정 인식개선 교육	⑩ 적극행정 우수직원(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 확대 ⑪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⑫ 도민의견 반영 계획수립

#### ❸ 적극행정 세부 추진계획

세부 추진계획	소관부서	추진일정
<b>1. 적극행정 시스템 개선</b> 1-1. 적극행정 실행체계 유지 [2.23]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과제 발굴 1-2. 적극행정위원회 강화 [7.31] 정기회의 수시회의 1-3.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채취 제도 활성화 [11.30]	ESG경영팀	6월 연 1회 연중 수시 연중
<b>2. 적극행정 지원·보호 강화</b> 2-1.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연중] 2-2. 적극행정 정책보호관 운영 [연중] 2-3. 적극행정 정책보호관 제도 운영 [연중]	청렴감사실	연중 연중 연중
<b>3. 소극행정 예방 및 협력 노력</b> 3-1. 소극행정 예방·점검 및 점검조치 제도화 [연중] 3-2.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 3-3. 임직원 적극행정 인식·행태 개선 교육 [연중]	인사총무처 청렴감사실 ESG경영팀	연중 연중 6월 ~ 12월
<b>4.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b> 4-1. 적극행정 우수직원(부서) 선정 및 인센티브 확대 [연중] 4-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확산 [연중] 4-3. 도민의견 반영 계획수립 [연중]	ESG경영팀	7월 ~ 12월 7월 ~ 12월 6월 ~ 12월

## 전북개발공사('25.6.)

문서번호	인사총무팀-1906
보존기관	영구
보고일자	2025.06.19

구분	선임일당	팀장	부장	원장
재	김	김	조	06/19 김
협조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적극행정 추진계획



### 3 적극행정 추진 방향

####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
- 우리원 인사규정 제114조(적극행정)

제114조(적극행정) ①원장은 임직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 기관 비전, 경영이념과 연계한 적극행정 추진 방향 도출

-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제 해결 중심의 실행기관”

- 단순 행정이 아닌 능동적·선제적 해결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도약

실업목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MISSION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VISION	"전북 경제의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자!"
경영이념	특 화 발 전 성 과 지 향 현 장 중 심 지 속 가 능

비전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제 해결 중심의 실행기관
전략목표	❶ 실행력 제고 ❷ 제도 내재화 ❸ 도민 체감 성과 창출
전략과제	① 전담부서 지정 ② 실행계획 수립 ①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② 연책 제도 도입 ① 민원·애로사항 우선 처리 ② 성과 홍보

#### □ 적극행정 추진 3단계 로드맵

- 조직의 실행역량 수준과 제도 정착 속도를 고려, 단계적 추진

단 기 (2025년)	중 기 (2026년)	장 기 (2027년)
제도 기반 마련	내재화·체계화	정착 및 대외 확산
• 전담부서 지정 •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직원교육 등 인식제고	•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 활용 • 연책제도 도입 • 직원 교육, 성과관리 연동	• 도민 참여 피드백 도입 • 도민정책 연계 모델 발굴 • 적극행정 선도기관 브랜딩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25.6.)

### III

##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1 적극행정 세부 추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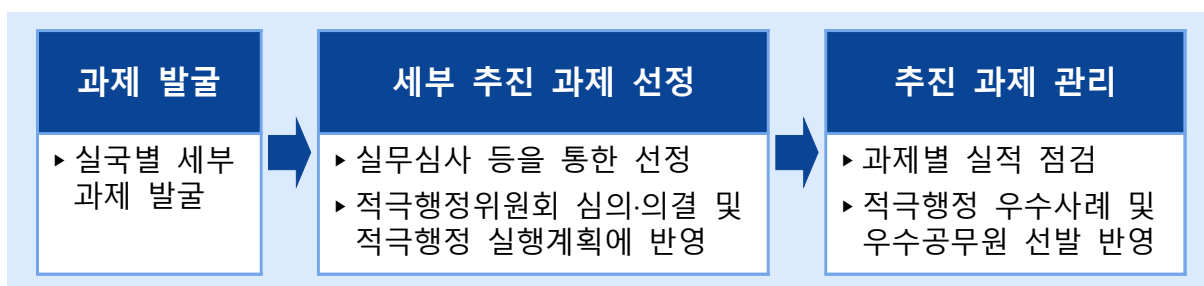
#### □ 추진방향 및 계획

○ 도민 편익 제고, 관행 혁신, 현안 업무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세부 과제 선정 및 중점 추진

- (중점분야) ①'25년 역점 시책, 공약 사업, 현안 업무 과제, ②도민 편익 증진, 불편 사항 해소 기여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중장기적인 추진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 선정

- (추진절차)



#### □ '25년 세부 추진 과제

○ 도 본청

연번	세부 추진 과제	주관부서
1	☑ 도민과의 현장 행정 소통 강화	자치 행정과
	▶ 도정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방안 모색	
2	☑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 해소	기업애로 해소과
	▶ 기업-공무원 1:1 매칭, 기업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파악·처리	
3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인구청년 정책과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보상 체계 마련	



○ 공공기관(14개 출연기관)

연번	기관명	내용	
1	전북테크노파크	'24년 성과	도내 중소기업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전북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 참여 기업 사전컨설팅(175개사) 추진
		'25년 과제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로 고객 접근성 및 효율 향상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관리시스템(JBCIS), R&D 종합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고객 사용 설명회 등 홍보 실시
2	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	'24년 성과	권역 연계를 통한 바이오산업 협업 플랫폼 구축 : 국책사업 기획과제 발굴(8건), 기획 분과(14개) 운영 등
		'25년 과제	농생명 분야 유망 기업 쏠 주기 단계별 지원·육성 : 창업 아이템 구체화·제품화 및 자립 성장 지원부터 제품·시장 다각화, 지역 앵커 기업으로의 발전까지 지원
3	자동차융합기술원	'24년 성과	구매 계약 제도 수요자 중심 개선 : 서류 통합 및 절차 간소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정부 지정 정보처리시스템 활용 통한 신속성·투명성 확보
		'25년 과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범위 확대 추진(이차전지 분야) :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적 행정, 공공 인프라의 신속한 개선을 통한 민간 수요 대응 기반 마련, 공공 시험기관으로서의 책임성·신뢰성 제고
4	전북신용보증재단	'24년 성과	지자체 신용등급 규제 해제 : 보증 사각지대 해소 및 전북 지역 소상공인 형평성 개선, 1조 원대의 자금 공급으로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
		'25년 과제	찾아가는 금융 복지 및 소통 확대 추진 : 금융 복지 이동출장소 확대 및 지역순회 세미나 개최를 통한 도민 소통채널 및 협력 체계 확대
5	에코융합 섬유연구원	'24년 성과	지역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계 협력사업 추진 : 전북-대구 지역 간 특장점 연계 및 협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초광역권 협의체 구축 및 신규 사업 수주 등
		'25년 과제	기업과의 동행 프로젝트 운영 : 1직원-5기업 전담 매칭 및 연계 협업 사업 발굴, 기술 상담,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등 전방위 지원 추진
6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의료원	'24년 성과	건강 취약 계층 방문 진료 제공 체계 구축 :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 건의 및 사업자 선정
		'25년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24시간 분만, 산후조리, 신생아 응급 진료 등 지역 완결적 보건 의료 인프라 구축 및 공백 없는 필수의료 제공 확대
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24년 성과	환자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활동 시행 : 환자·보호자·직원 대상 교육 수행, 릴레이 영상 제작 등 창의적 캠페인 운영 ➡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 안전 캠페인 최우수상' 수상
		'25년 과제	환자 중심 의료원 안내 체계 개선 추진 : 관행적인 표지 설치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설계, 환자 및 보호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선제적 조치

연번	기관명	내용	
8	전북연구원	'24년 성과	2036 하계 올림픽 국내 도시 후보지 선정(전주시) 기여 : 올림픽 대회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 추진,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개최 계획서 작성 등
		'25년 과제	2036 하계 올림픽 정책협의회 추진 : 올림픽 연관 정책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연계, 부처 제안 등 IOC 관심 분야 집중 추진
9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24년 성과	장학 사업(특별지정장학금) 확대 지원 :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 사업 수익 일부(3억 원)를 「새만금희망태양광」 특별지정장학금 용도로 기탁
		'25년 과제	「새만금희망태양광」 특별지정장학금 장학생 선발 :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ESG 경영 실천,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
10	전북여성가족재단	'24년 성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기업의 일터 혁신 : 일·생활 균형 기업 문화 네트워크 구축,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 및 추가 발굴, 워킹맘대디 워라벨 가족학교 운영 등
		'25년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 운영 :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부모 교류 증진, 위기 가족 보듬 사업, 가족 서비스 지원 정책 포럼 운영, 다문화 가정 원스톱 지원 서비스 고도화 등
11	전북국제협력진흥원	'24년 성과	새만금 한글학당을 활용한 외국인 유입 체계 구축 : 새만금 한글학당을 외국인 유치 해외 거점 기구로 활용, 외국인 유학생(138명), 근로자(65명) 총 203명 도내 유입
		'25년 과제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현장형 서비스 확대 운영 :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의 제약 요건(시간·장소·언어·문화)을 배려한 고객 친화적 현장서비스 운영 추진
12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24년 성과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한 기관 협업 홍보 웹툰 제작 : 적극행정, ESG경영, 인권경영 등 소재 활용 홍보 웹툰 총 5화(150장) 제작 및 기관 보유 누리집·SNS 활용 홍보
		'25년 과제	정책거버넌스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산업 현장 소통 강화와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및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24년 성과	지방소멸대응 기초단체 협력 전북형 위케이션 사업 추진 : 도내 체류형 전북형 위케이션 관광객(1,215명) 유치 및 지역 화폐를 이용한 프로모션 추진
		'25년 과제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선 : 도내 활동 예술가 등 100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예술 현장 라운드 테이블 운영 및 공모 체계 개선 추진
14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4년 성과	지역 민관 협력 기반 찾아가는 농촌 이동 복지 지원 : 복지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도농 간 격차 해소,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4회, 365명 수혜) 및 지역 복지 기반 강화
		'25년 과제	도민 체감형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지역 맞춤형 취약지 지원 체계 구축, 찾아가는 현장 복지 서비스 강화, 전북인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인프라 연계 및 돌봄 상담 지원 등

### □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관련 주제 간부회의 안건 상정 등 주기적 논의 추진
-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반기별 추진을 통한 도 및 시·군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포상
- 공공기관 자체 적극행정 교육, 소통 행사,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 추진

기관명	내용
전북국제협력진흥원	<b>‘창의적 업무 제안 제도’ 운영</b> : 업무 개선, 고객 만족, 혁신 업무 발굴 등 행정·사업 업무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b>‘소통 문화의 날’ 활용 적극행정 문화 확산</b> : 대내 소통 강화와 상향식(bottom-up) 전사적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한 ‘소통 문화의 날’ 운영 및 적극행정 주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b>‘적극행정 소통 DAY’ 운영</b> :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의 적극행정 실천 사례 공유 및 문제 해결형 소통과 적극행정 아이디어 제안 활성화 등

###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개요

- (개념)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방향 등을 제시하거나, 지자체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심의하는 의사결정 지원 기구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
- (구성) 총 19명(당연직 위원 5명, 위촉직 민간위원 14명)

당연직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분야별)	정부혁신(1), 규제개선(2), 인사(2), 감사(1), 지방자치(1), 지방재정(1), 청년정책(1), 지역활력(2), 지역혁신(3)

※ (위원장) 행정부지사 / (간사) 인구청년정책과장(적극행정 책임관)

- (임기) 3년('22. 12. 10.~'25. 12. 9., 제2기), 1회 연임 가능
- (운영) 법정위원회로서 정기회의(반기) 및 수시회의(필요시)
- (역할·기능)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등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위원장이 자문한 사항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 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합동회의)
- 적극행정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에 대한 법적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 적극행정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 (전문성) 사회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촉
  -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위원(당연직)으로 참여하여 전문성·협업 강화
  - 위촉 시 법적·행정적 자격요건을 마련하고 철저한 검증 수행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의2(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1. 전북자치도 소속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감사 경력자, 정부혁신·규제개선·인사·지방자치·지방재정·성과평가 및 청년정책·지역활력 등 각 분야에서 경험 있는 자
  - ※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민간위원의 10% 이상이 되도록 고려하여 구성

○ (공정성) 위원회의 신분보장,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2.12.27.) 사항 반영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3조의2제3항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위원회 활성화 방안

○ (현안심의 강화)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한 선제적 안건 상정, 의견제시 활성화

-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 사안은 신속히 상정하여 논의

※ 도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현안 심의 추진 노력

○ (이해관계자 위원회 참여) 위원장이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조치

- (공공기관 집행 대행) 소관 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집행 대행\* 또는 적극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면책 추진
- \* 자체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방공공기관에 한함
- (제도 홍보) 위원회 의견제시 등 관련 제도 안내·홍보 자료 제작, 도 및 공공기관 지속 배포 등 홍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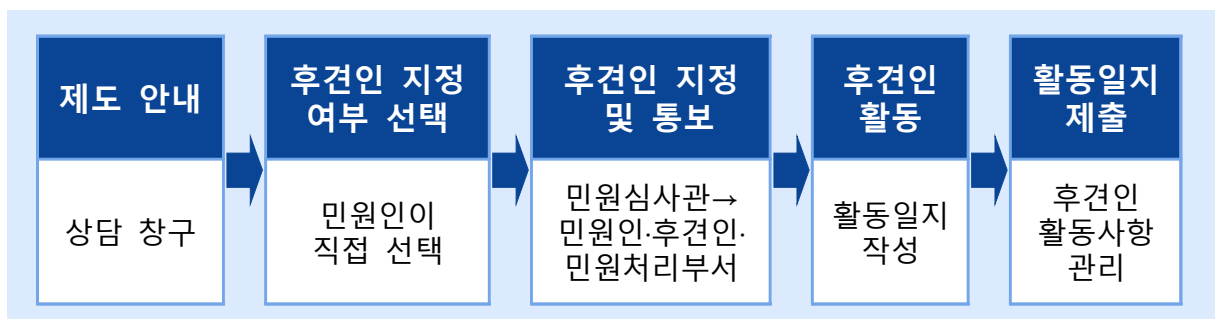
## 4

## 적극행정 민원 창구 운영

## 자치행정과

### □ 민원후견인제와 연계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 (목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도민의 민원처리 과정을 지원하여 민원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
- (내용)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여러 번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민원 1회 방문 후견인제 운영
- (운영기간) 연중
- (대상)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 (후견인) 실·국 주무과 주무팀장 17명
  - (역할) ①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상담, ②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 위원회에서의 민원 진술 등 지원, ③서류 보완 등 민원서류 전반적인 사항 지원, ④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
- (절차)



### Ⅲ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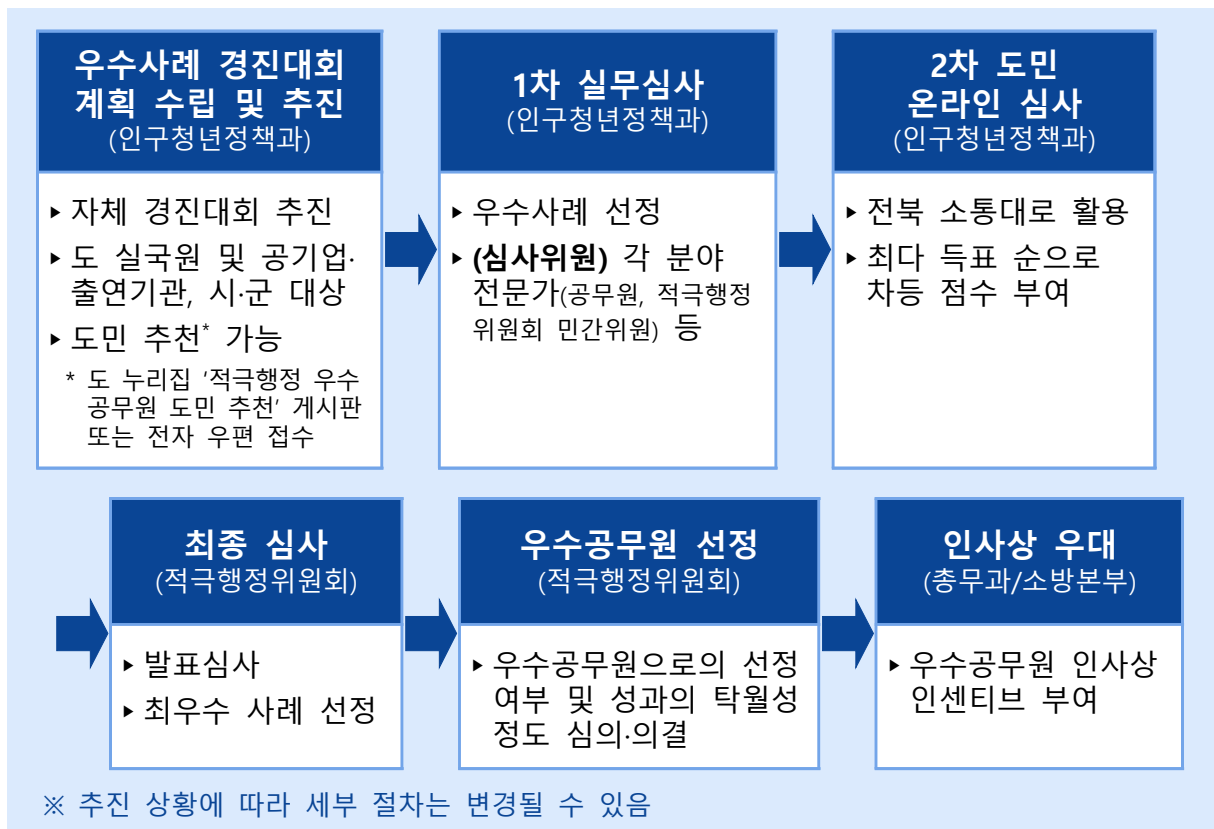
### 1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및 우수공무원 선정

- (추진방식)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우수사례 선정 후 주요 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경진대회 추진 및 우수공무원 선발 소 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절차 마련·운영
- ※ 경진대회 추진과 별도로 도민이 도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상시 추천 가능(적극행정위원회 우수공무원으로 미선정 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공 예정)
- (선정시기) 상반기 4~6월 / 하반기 7~9월
  -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우수공무원 선발'과 연계 운영
- (선정대상) 5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 공무원직 등
- (선정규모) 약 10건(상반기 5건 / 하반기 5건 이상)
  - 우수공무원 20명 이상\*, 우수팀 5개 이상 \* 우수팀 팀원 포함
- (선정분야) 적극행정을 통한 ①규제·관행 혁신, ②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③민원 또는 갈등 조정·해결, ④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⑤행정 효율 향상, ⑥선제적·창의적 대응, ⑦경제 활성화 등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발굴·추진한 사례
- (선정요건) ①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②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③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예정

## ○ (추진절차)



## ○ (심사기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 준용

심사지표	주요내용
도민 체감도(40)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정도(재정 절감, 만족도 제고 등) ▶ 정책 및 서비스 혁신으로 도민 편의 증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30)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노력 투입, 기존 업무 범위 외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노력도 및 성과
과제의 중요도·난이도(20)	▶ 해당 과제가 도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 ▶ 관련 업무나 민원 요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정도 또는 열악한 정책 환경 등 업무 추진상의 어려움 정도
확산 가능성(10)	▶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 도민 추천 사례, 협업 사례 가점 부여 및 도민 온라인 심사로 도민 체감도 반영

### < 2025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선정 목표 >

총 인원	상반기	하반기
20명, 5개 팀 이상	7명, 2개 팀	13명, 3개 팀 이상



### □ 인사상 인센티브 기본원칙

-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개인별 희망 고려
-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사상 인센티브는 선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여  
※ 단, 내부 인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우대사항 결정 및 부여

#### 총무과

#### 일반직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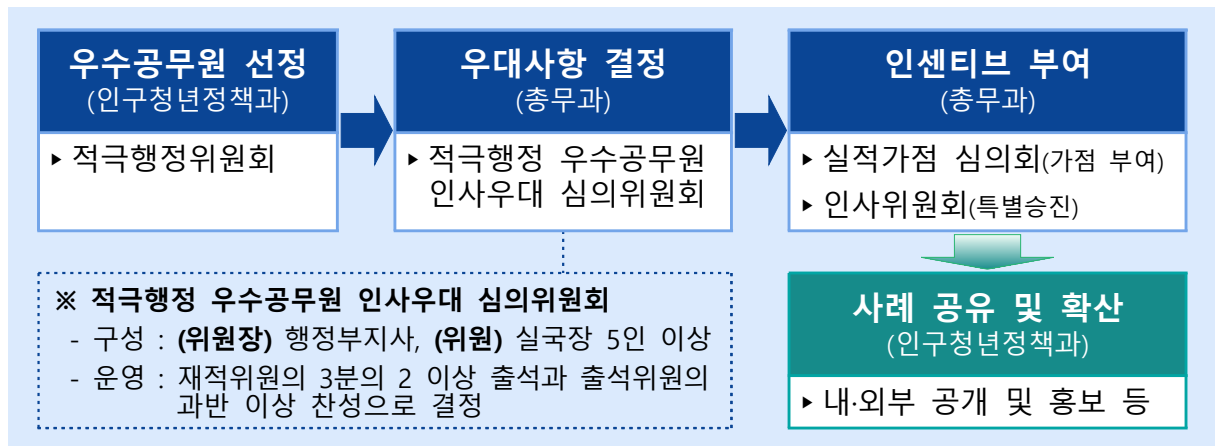
- (대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임기제, 공무직 포함)
- (기준) 성과의 탁월성 정도(중요도, 난이도, 파급효과 등), 성과 창출의 기여도·노력도,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정도, 대상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1점\* 부여 및 '상', '중' 등급은 8개의 우대사항 중 등급에 맞는 차등우대 사항 1개를 선택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상 '파격적 인센티브' 1종 기본 부여

평가결과 (성과우수성)	우대 사항	
	공통 우대	차등 우대(우대사항 중 1개 선택)
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1점 부여	① 특별승진(4급 이하) ② 특별승급(6급 이하) ③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모든 직급) ④ 장기교육훈련 희망 시 선발(모든 직급) ⑤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단축(4급 이하)
중		⑥ 특별휴가(3일)(모든 직급) ⑦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7급 이하) ⑧ 전보 희망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 적용(5급 이하)
하		-

※ 공무직은 평가결과 '상', '중' 해당 시 국내 선진지 시찰에 우선 선발

○ (절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심의위원회에서 우대 종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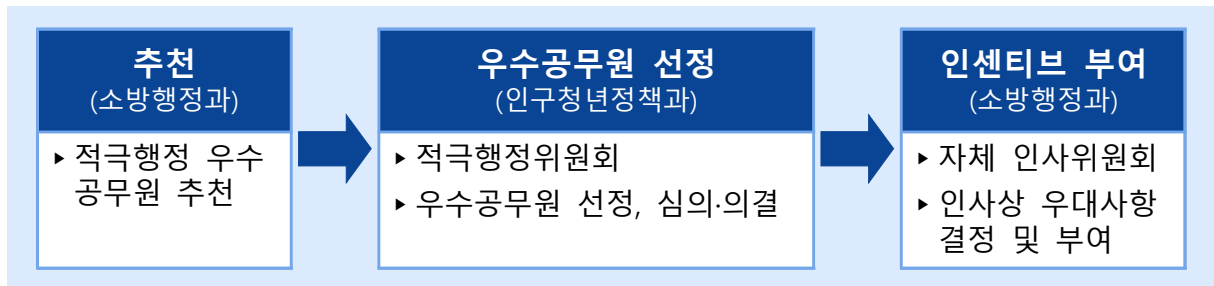


○ (부여시기) 우수공무원 선정 시(반기별 1회)

○ (우대종류)

구분		주요내용
일반직	특별승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나 1년 단축이 가능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4급 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 임용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 이하)의 호봉을 1단계 승급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성과상여금(6급 상당 이하) 또는 성과연봉(5급 상당 이상) S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1.0점 부여
	특별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 포상휴가 부여
	근속승진 기간 단축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근속승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이를 단축하여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희망부서 전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
공무직	선진지 시찰	국내 선진지 시찰에 우선 선발

- (대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 (기준) 성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 종류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
- (절차)



## □ '25년 부여 계획

### < 2025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

총 인센티브	파격적 인센티브
20명 이상	10명 이상(50%)

## 3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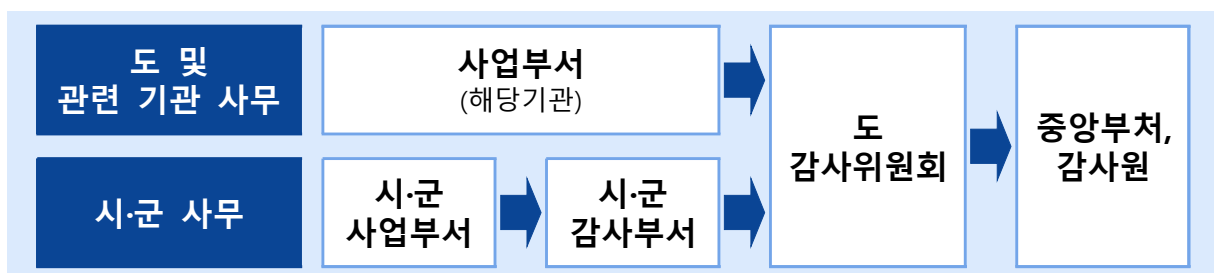
### 인구청년정책과

## □ '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확립 및 시범운영 추진

- (목적)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여건 조성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2025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5.4.23.)
- (내용) 적극행정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게 실적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및 보상 제공으로 실천 의지 제고 및 정책 효과성 기여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5급 이하 직원(과장급 미만 실무자)
- (추진계획)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지자체 벤치마킹, 내부 여건 분석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운영계획안 마련·운영

## □ 사전컨설팅 감사 개요

- (개념) 공무원 등이 관련 법 및 규정·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효력)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사 면제
- (신청주체) 도, 시·군, 도 교육청, 의회, 출연기관, 법인·단체 등 자체감사 대상 121개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월) 이후 도 교육청, 의회 등 감사 대상 기관 확대(106개→121개)
- (대상사무)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법령 해석·적용이 곤란한 사무 등
- (처리절차)



## □ 도지사 말·말·말

## ■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적극 활용

- 그동안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고민과 추진 의지가 적었기 때문임
- 기업 민원 등 특혜 소지가 있거나 법령·규정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바람(24.1.5., 간부회의)

##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운영 내실화 노력

- 신청 시 복잡한 절차, 감사 전환 우려 등 제도 접근의 부담감 해소
  - 주요 내용 위주의 신청서 작성으로 제도 접근의 편의성 도모
  -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추후 감사 면제 규정 홍보
  -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23년부터 모든 시·군으로 「사전컨설팅 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확대 운영
- \* ('23년 이전) 당해연도 감사 대상 5~6개 시·군 → ('23년~) 14개 시·군
- 분야별 전문인력(10명)을 배치하여 전문성 있는 의견 제시
  - 총 4개 분야(행정·복지, 보조금, 계약·회계, 국토·건설)로 TF 구성·운영
  - ※ 사전컨설팅 감사 업무량 증가 시 관련 부서와 인력 충원 방안 등 협의
-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 및 사례 전파
  - 도, 시·군, 출연기관 등 제도 안내 및 상담창구 추진 관련 공문 송부
  - 유사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를 도 감사위원회 누리집에 게재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
  - 공공감사정보시스템(감사원)에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결과 입력

## □ 타 기관 사전컨설팅 감사 활용 방안

- 감사원, 정부(행안부), 타 시도 사전컨설팅 감사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접수 시 명확한 의견 제시

## □ '25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

- '25년 신규 시책사업인 「건설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련 현장점검」 추진 시 공사 관계자 대상 사전컨설팅 감사 홍보물 배포 및 제도 안내
- 「사전컨설팅 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와 병행하여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안내 등을 포함한 찾아가는 기술감사 교육 지속 추진

- 분야별 사전컨설팅 집중 발굴 기간(연 1회 2개월) 운영 추진
  - 매년 특정 분야(기업지원, 계약·회계, 보조금, 시설공사 등)를 선정하여  
도·실·국, 사업소, 시·군, 출연기관 등 애로사항 신속 해결
- 사전 컨설팅감사 추진상황 언론 홍보 강화
  - 현장 상담창구 확대 운영 계획·현황 및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등  
지속적인 제도 홍보 도모

## 2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 적극행정 면책요건

- (공익성)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적극성) 공무원 등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경미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 적극행정 면책 운영

-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로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 \* ('21) 10건 → ('22) 10건 → ('23) 12건 → ('24) 9건 → ('25 목표) 10건 이상
- 피감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감사권익보호위원 운영
  - 징계가 예상되는 피감사자의 자문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 중 지정

## □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발령('24.6월)

※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24.1.18.)에 따른 기존 도지사 훈령 폐지 및 감사위원회 훈령 발령

- 적극행정 면책심의회를 감사위원회에 둬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 현장면책 근거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제고

구 분	기 준	현 행
면책심의회 공정성·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인 이내 구성(위원장: 감사관)</li> <li>▶ 감사기간 중 면책심의회 개최 가능(이 경우 위원장: 감사반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 회의가 적극행정 면책 심의회 기능 담당</li> </ul>
현장면책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추고 그 사안이 경미할 경우 면책 결정(심의회 생략)</li> </ul>

## □ '25년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획

-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 개최(감사원 협조)
- 분기별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홍보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인구청년정책과

###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

## □ 면책보호관 운영 및 홍보

- (면책보호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명의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 '면책 건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감사원·상급기관 감사 면책 신청 시 지원

\* 도 면책보호관 : 인구청년정책과장(적극행정 전담 부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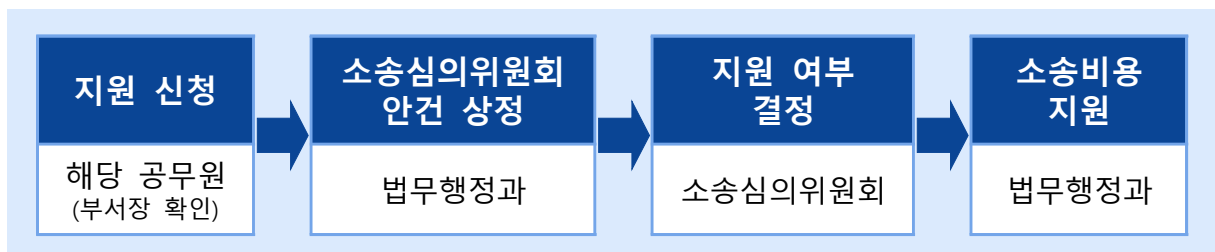
- (목적)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 시,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면책 신청 및 심사 과정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

- **(지원대상)**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자
  - ※ 적극행정위원회로부터 '적극행정 면책 건의서' 및 '심의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 **(제도홍보)**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 및 전 직원 대상 제도 안내 추진

### 3 소송 등 지원

#### □ 법무행정과 소송비용 지원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목적)** 도 소속 공무원 등(퇴직 공무원 포함)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상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공무수행 안정성 확보
-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 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 포함)와 기간제근로자
  - 도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 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절차)**





○ (지원내용)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사건 : 100만 원 이내</li> <li>▶ 본안 및 중요사건 : 소가에 따라 200~1,000만 원 이내</li> <li>※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민사소송 비용 지급기준 준용</li> </ul>
형사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단독 사건 : 300만 원 이내</li> <li>▶ 다수 관련 사건 : 500만 원 이내</li> <li>▶ 도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 : 700만 원 이내</li> </ul>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민사사건) 및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형사사건)에는 소송비용 회수

## ▣ 구상권 행사 제한

- 구상권 행사 여부 판단 시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여 구상권 행사 제한

### -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2조(패소종결시의 조치)**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4.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의 문책 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판명될 시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소송수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 □ 법무행정과 법령 유권 사례 제공

○ 법률정보시스템 「로앤비(LAWnB)」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업무 수행 시 정당한 행정처분을 위해 국내 판례, 법규, 결정·해석, 문헌, 온라인 주석서(법령해석서) 등 신속·정확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수행 능력 제고

## □ 총무과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지원

- (근거) 「헌법」 제29조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목적)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 보장
- (가입대상) 도 소속 직원(청원경찰, 공무원 포함)
- (보상한도)

민사	형사	연간 총액
1청구당 5천만 원	1청구당 5천만 원	3억 원

- (보상내용) ①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공제자가 지출한 각종 비용(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등

### □ 행정종합배상공제 약관상 보장 내용

**행정종합배상공제 보통약관 제19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제29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제29조(손해방지의무)제1항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공제회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제3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 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형사절차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아래 비용**을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2. 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형사방어비용
3. 형사합의금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규정 제정**

- 적극행정 공무원을 법률적으로 전방위 보호·지원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연내 제정 및 전 직원 대상 홍보 추진 예정

#### 4 실무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 **정책기획관** **상급자 전결권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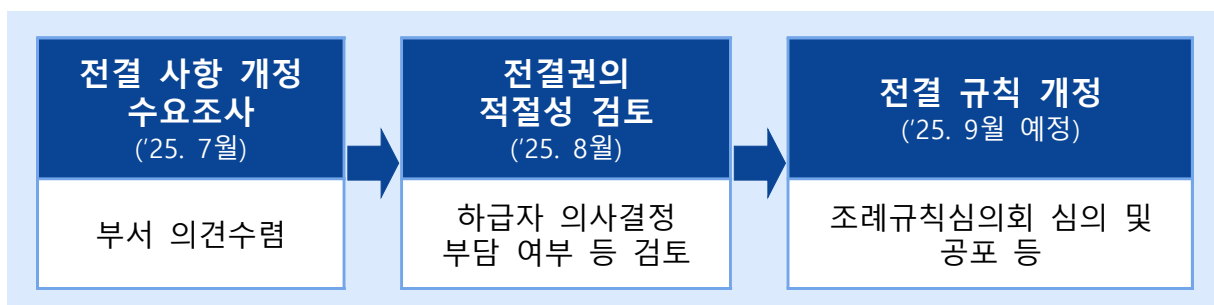
- (목적) 자치단체장(또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명확히 하여 하급자의 정책 결정 부담과 책임 완화
- (현황) 단위 사무 : 9,440건

구분	사무 수	도지사 결재 사무	전결 사무			
			부지사	실·국·원·본부장	관·과장	팀장·실무자
단위 사무	9,440	64	377	1,894	6,413	692

- (방향)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시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지침과 부서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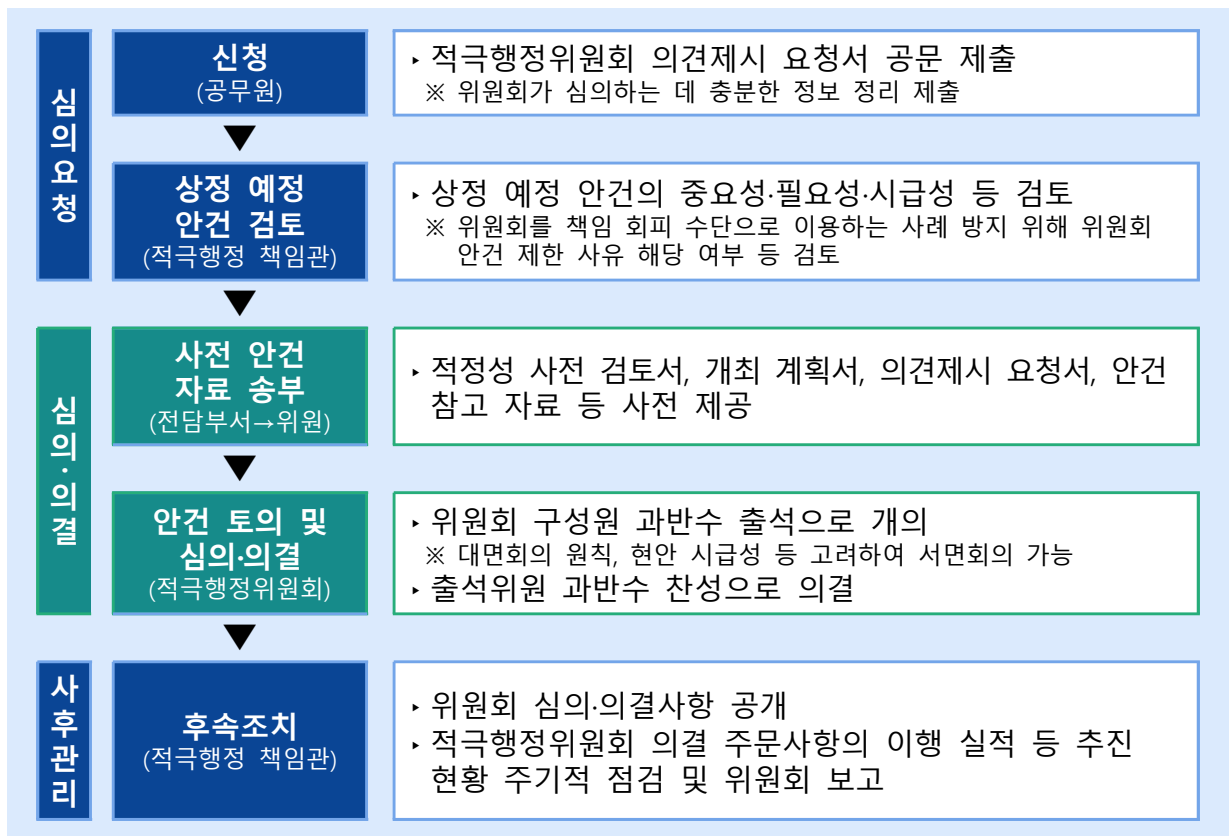
※ ① 신규 사무의 기안자 및 전결권자 지정, ② 기존 전결 사무의 통합 또는 폐지 여부 검토, ③ 사무 명칭 및 전결권자 현행화

- (절차)



##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 (목적)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 (내용)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방향 등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15조·제16조,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
- (절차)



### <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제한 사유 >

- ☑ 관계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소관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 ☑ 상정 안건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등

○ (효과)

-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

\*\* ①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면책 건의) 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문책 요구 등에 대한 면책 건의 가능

- (징계 등 면제)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음

\* ① 대상 업무와 징계 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 VI

## 소극행정 혁파

### □ 소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도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유형)

적당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부조리한 관례답습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이 아닌 소속 기관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1

###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 조치

### 감사위원회

#### □ 소극행정 현장점검 및 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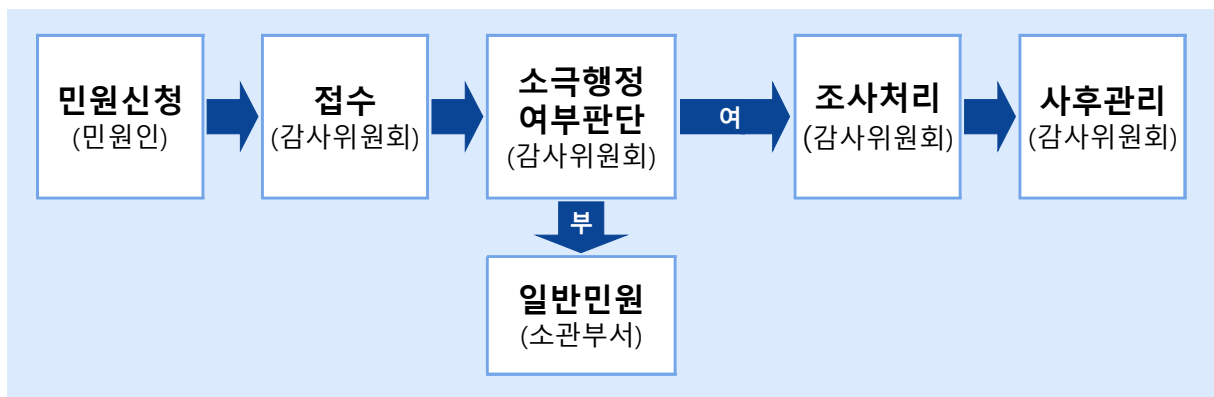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현장점검 추진
  - (점검대상)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점검시기) 취약시기(연말연시 등) 복무감찰과 병행 실시
    - ※ 점검 결과 소극행정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감경불가)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적발 사례 및 처분 결과 등을 전 부서에 공유하여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소극행정 적발 사례를 전 직원 전파 등 사후관리 강화(반기별)
- 시·군 소극행정 신고 및 처리실태 점검(반기별)
- 국민권익위원회 소극행정 예방 교육 지원 신청(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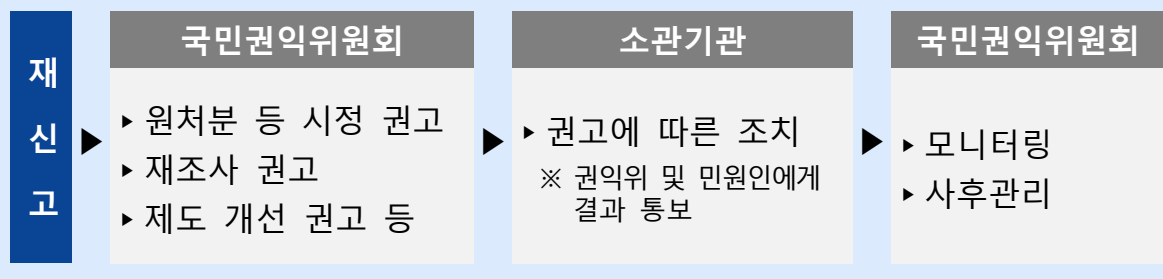
### □ 감사위원회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목적) 도민 소극행정 민원 해소
- (운영방법) 온·오프라인 접수 및 처리
- (운영시기) 연중
- (접수창구)
  - (온라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민원신고센터(참여마당>공무원부조리신고) 및 국민신문고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처리절차) 소극행정 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위원회 조사, 소극행정 신고 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은 사업부서 재지정 처리



### □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 소극행정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민원인이 소극행정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재신고 가능



## □ 자치행정과 불충분한 설명 관행 개선

###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 설명 양식 활용(참고)

- 불허가 사유를 상세히 적시, 친절하고 성의 있는 답변 시행

※ ① 처분의 법적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및 조문 내용), ②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③ 권리구제절차 등 적시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 부서의 검토 의견, 담당자의 연락처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 거부처분 통지 시 이의신청 등 민원인의 구제절차 고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 이의신청 절차, 신청기간 등을 고지하고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

※ 고충·질의·건의민원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개별법에 이의신청 조항이 있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구제절차 고지

## ▣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 ○○○ 귀하

제목 ○○○○ 신청 불허가 알림

1. (인사말)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답변 요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민원명, 접수번호)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불가, 불가처리, 불채택 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내용

○ 처분결과 : 불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담당자	검토내용
건축과 ○○○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li> <li>•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li> </ul>
농업축산과 ○○○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li> <li>•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li> </ul>

3. (구제절차 고지)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팀,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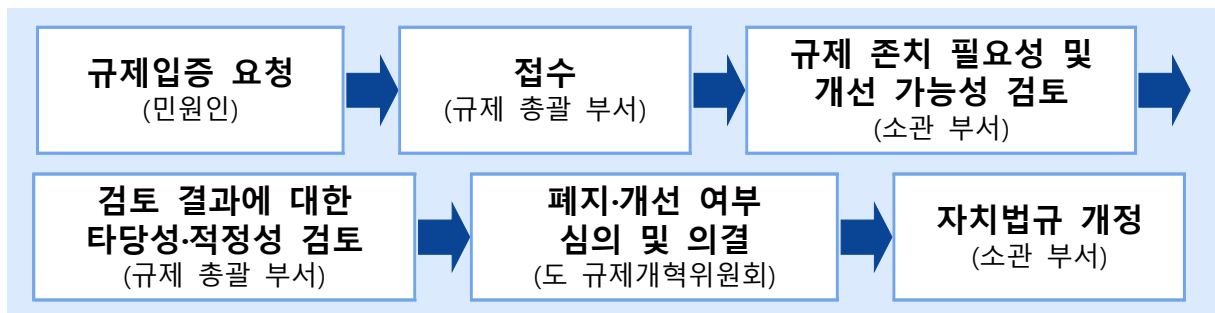
## □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및 공유·확산

- (목적) 도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및 개선 결과 공유·확산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 \* (그림자·행태 규제) 합리성을 넘어선 처분 지연, 불필요한 절차 강요, 행정주체의 소극성 등으로 주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내부규정(조례·규칙 포함)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 (개선분야) ①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기업 영업 환경 개선, 국민 편의 제고), ②소극행정·관행 행태 규제 개선, ③유연한 법령 해석, ④사회통합 강화 등
- (발굴방법) 규제입증책임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과제 발굴
- (공유·확산) 타 시·도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에 대해 도내 시·군 현황 파악 및 도입 가능성 검토 후 도입이 필요한 사례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개선 이행력 확보

## □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활용으로 적극행정 걸림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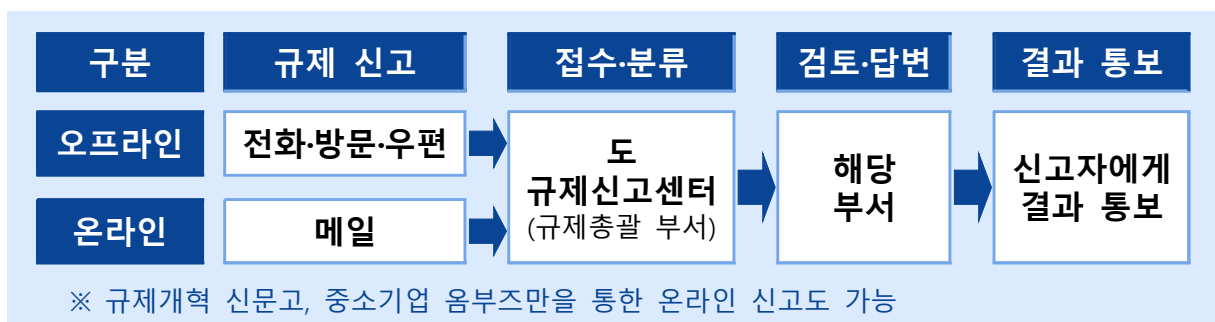
- (목적) 도민·기업이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지자체)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
- (대상) 도민 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모든 자치법규(조례, 규칙)
  - '25년 도 등록규제\*(208건) 대상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 \* (등록규제)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규칙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운영) 전북자치도 누리집 규제입증책임제 민원 창구 상시 운영 (민원소통>규제혁신>규제입증요청)

○ (추진절차)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목적)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를 개선·완화하여 기업이나 도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 (대상) 도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 등
- (운영) 연중 상시
- (규제혁신 분야) ①기업·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 ②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제, ③창업, 기업 유치, 신산업 활성화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④도민 일상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
- (처리절차)



□ '25년 규제애로 해소 활성화 계획

- 민생 및 기업현장 규제 발굴 및 개선
  - 중앙규제를 발굴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하여, 그림자규제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를 해결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내부규정과 소극행정 문제를 발굴·개선

## VII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1

### 소속 직원 인식·행태 개선 교육 실시

####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 기본 직장교육 추진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 직원 대상 대면 또는 온라인(이러닝) 적극행정 기본 직장교육 실시

####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 심화 직장교육 운영

- 도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담당자 등의 적극행정 업무 인식 향상과 적극행정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심화 교육 실시(연 1회)
  - (교육시기) '25. 8월 중
  - (교육대상) 도, 시·군(14개), 공기업·출연기관(16개) 적극행정 및 관련 업무(인사·감사 등) 담당자 및 희망 직원 등
  - (교육방법) 민간 적극행정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적극행정 관련 체험·참여·토론식 교육 및 간담회 등

#### □ 인재개발원 적극행정 교육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 (기본과정) 적극행정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편성내역) 5개 과정, 17기, 1,264명\*

\* 핵심리더 2기 164명, 신규임용자 9기 900명, 역량강화 3과정 6기 200명

※ ('23년) 3개 과정 14기 1,320명 → ('24년) 5개 과정 27기 1,962명

- (주요내용)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 (편성시간) 교육과정 기수별 2~3시간 편성

- (맞춤형과정)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정 운영
  - (편성내역)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1기, 30명
  - (주요내용) 행정·국가소송 절차 및 주요 사례, 행정절차법 소개 등
  - (편성시간) 2~3시간 편성
-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정 연중 상시 운영
  - (편성내역) 2개 과목, 9기, 900명
  - (주요내용)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 나라배움터 교과목 공동 활용
  - (편성시간) 연중 상시

#### □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 개최

- 감사원 협조를 통한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회 실시

#### □ **법무행정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정보 제공 및 홍보

- 행정포탈 내 법률정보서비스 「로앤비(LAWnB)」 구축 안내 및 직원 홍보
  -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전직원 홍보 강화

## 2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 □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홍보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카드뉴스, 홍보 영상, 포스터 등 제작·홍보
  -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성과 확산

- 도 누리집·블로그·소셜미디어(SNS), 전북 소통대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ON)' 등 각종 홍보 플랫폼 적극 활용
- 언론 보도, 전광판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 주기적 추진
- 행정포탈 내 적극행정 게시판 운영으로 인식개선 및 공감 형성
- 행정안전부 및 전국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웹툰 등 각종 콘텐츠와 관련 소식 등 게시·공유

## □ 범정부 행사·조사 등 적극 참여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자체 대상 적극행정 공무원 인식도 조사 등 공무원 및 도민이 참여 가능한 행사·조사 참여·홍보

## 3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참여·소통 강화

### □ 인구청년정책과 적극행정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실제 도민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반영하여 도민 체감도 제고
- (운영기간) '25. 7월 ~ '27. 2월
  - ※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활동 기간('25.3.~'27.2.) 만료 시까지
- (구성) 19명(전주8, 군산3, 익산1, 정읍2, 남원2, 김제1, 완주1, 부안1)
  - ※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인력풀 활용 /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균형 있게 구성 노력
- (주요역할) ①적극행정 활성화 관련 정책 방향 및 추진 의견 제시, ②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위원 및 주민 체감도 조사 참여, ③우수사례 SNS 홍보, ④기타 적극행정 관련 활동 등
- (운영방법)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활용(모니터링단 전용 카카오톡 단체방, 오프라인 소통회의 등)

□ **인구청년정책과** **도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추천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 도민 참여를 통한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 및 체감도 향상
  - **(도민 추천)** 적극행정 온(ON), 국민신문고, 전북자치도 누리집 적극행정 게시판(분야별 정보>법무/행정/조세>적극행정>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도민추천) 등을 통해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상시 추천 가능
    - ※ 도민 추천 사례는 경진대회 평가 시 가점 부여
  - **(도민 평가)** 2차 심사를 도민 온라인 투표로 진행하고 결과 반영(20%)
    - ※ '전북 소통대로' 투표 시스템 활용, 최다 득표 순으로 차등 점수 부여

## 1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주요 내용	일정	비고
<b>1. 적극행정 추진 전략 및 과제</b>		
○ 적극행정 협력체계 강화	-	-
- 적극행정 활성화 실무 태스크 포스(TF) 운영	계속	인구청년정책과
- 시·군 및 지방 공공기관 협조 체계 강화(체계 완비, 책임관 회의 정례화, 계획 수립 및 문화 확산 등)	계속	인구청년정책과 (예산과 협조)
<b>2. 도지사가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b>		
○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 과제 선정	2월~	전 실국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우수공무원 선발 등)	계속	인구청년정책과
○ 적극행정 민원 창구 운영	계속	자치행정과
<b>3.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b>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반기별 1회	인구청년정책과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연중	총무과, 소방본부
<b>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b>		
○ 사전컨설팅 운영 활성화 및 기능 강화	계속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계속	감사위원회, 인구청년정책과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비용 등 법적 지원(징계·피소 시 법적 비용 지원, 법률 자문 및 법령 유권사례 제공 서비스 등)	계속	법무행정과, 인구청년정책과
○ 실무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자체 위임 전결 규정 관리)	계속	정책기획관
<b>5. 소극행정 혁파</b>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예방 교육·홍보	계속	감사위원회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계속	자치제도과
<b>6.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b>		
○ 적극행정 교육 추진(기본·심화 교육, 교과목 운영 등)	계속	인구청년정책과, 인재개발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확산 및 도민 참여 강화	계속	인구청년정책과



## 2

## 추진상황 점검 및 적극행정 확산 관리

### □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 (점검주기) 반기별 1회
- (점검대상) '25년 적극행정 실무 태스크 포스(TF) 실행계획 분야별 주요 과제 및 부서 세부 추진 과제(3건)

### □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 관리

- 시·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여부 점검
  - (점검시기) '25. 7월
  - (점검방법) 14개 시·군 '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심의서 제출 여부 점검 및 심의 사항 확인
- 시·군 및 공공기관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점검
  - (점검시기) 하반기
  - (점검대상) 14개 시·군 및 16개 공공기관
  - (점검내용)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계획 공유, 발전 방안 논의 등

## 3

## 금후 계획

- '25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결과 제출 : '25. 7월
- '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추진 : '25. 7~8월
- '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실적 제출 : '25. 12월
- '25년 적극행정 세부 과제 이행 실적 관리 : 연중
- '25년 전북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의견제시 등) : 연중

